

광주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도입...지자체는 골머리

본촌동 동물보호소 수용 한계 달해...북구·광산구 시범 실시 광산구서만 한주 17마리꼴 입소...1년 예산 2000만원 불과 "10일간 보호·관리비용 턱없어"...위탁 동물병원 찾기 난항

광주시가 올해부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센터)를 도입했지만, 시범운영을 맡은 지자체들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지자체에 자체 운영시설이 없어 위탁을 할 동물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동물병원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를 도입하고 북구와 광산구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유기·유실동물, 학대 당한 동물, 사육포기 인수 동물을 10일간 보호·관리하게 된다. 10일이 지나면 광주시동물보호소로 이동한다.

광주시에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동물보호소로 유기동물이 몰리면서 포화상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센터를 도입했다.

또 보호소에 포화상태가 지속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자치구가 관리하면 유실동물의 주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광주시에 이달부터 북구와 광산구에 시범적으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당장 지자체는 센터 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에 자치구에 위탁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했지만 위탁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원칙상 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는 지역 내 동물병원에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을 맡을 동물병원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결국 문제는 비용이다. 센터 사업의 예산은 총 4000만원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한다.

전체적인 운영을 맡는 동물병원에 배당되는 금액은 자치구별로 한해 2000만원이다. 입소 동물은 100마리로 제한되며 나머지 유기·유실동물은 시 동물보호소로 이전된다.

동물병원은 마리당 20만원의 비용으로 치료비와 사료값 등 각종 관리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에 예산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마리당 2만원의 질병 검사 키트비용이 전부다.

이 비용으로 위탁을 맡을 동물병원은 없다는 것

이 동물병원 관계자들 반응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A동물병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마리당 20만원으로 10일간 보호하는 건 불가능하다. 동물병원이 전문 보호센터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탁을 맡으려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별, 중별, 증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기동물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되거나 관리되지 않아 피부병에 고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골절 수술 비용은 최소 150만원부터 이뤄진다. 이외 하루 입원 비용만도 5kg이하는 7만원 20kg이상은 11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광주시가 책정한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B동물병원 관계자는 "단순 구토 증상이나 감기에 걸렸다면 당당 5만원 선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을 입었거나 피부병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한마리당 수십·수백만원이 드는게 일반적인 동물병원의 치료비"라고 했다.

게다가 자치구마다 들게 포획사업을 진행해 대형견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사료값을 충당하는데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은 "하루 2만원의 비용으로 밤새나고 아픈 동물을 10일간 치료하고 돌봐야 한다면 어느 병원이 하겠다고 나설지 모르겠다"며 "질병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북구에 신고돼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2021년 801마리, 2022년 667마리, 2023년 701마리다. 광산구는 2021년 829마리, 2022년 808마리, 2023년 830마리로 한 달 평균 68마리, 한 주에 17마리 꼴로 입소하고 있다.

광산구는 2021년 829마리, 2022년 808마리, 2023년 830마리로 한 달 평균 68마리, 한 주에 17마리 꼴로 입소하고 있다.

이 비용으로 위탁을 맡을 동물병원은 없다는 것

이 비용으로 위탁을 맡을 동물병원은 없다는 것



상한 계란 없나...말바우시장 판매점 위생 점검 9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계란판매점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계란 유통과정과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건 브로커' 연루 전직 경무관이 받은 4000만원 성격 사고 공방

첫 공판서 피의자측 공소사실 부인

전직 경무관이 '사건브로커'로부터 받은 4000만원의 성격은 무엇일까.

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경무관 A(60)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주요 공소 사실은 A씨가 사건브로커에게 코인 사기 피의자의 불구속 송치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5일께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피의자 B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봤다. B씨는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 담당 팀장은 A씨의 예전 부하직원이었다.

A씨가 같은 해 9월 28일 광주에서 성씨를 만나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구속 송치를 대가로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12월 B씨가 불구속 기소결정으로 송치되자 청탁 이행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진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씨에게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경력을 알려 줬을 뿐 수사정보를 알려 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A씨측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 변호사가 동석했고 조사내용

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조사 당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고 검찰은 증거부인을 다투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4000만원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사건브로커 성씨, 코인 사기로 재판 받고 있는 B씨, B씨 수사담당 팀장인 C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A씨 측은 A씨의 회사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4000만원이 차용금 성격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C씨를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건브로커와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와 그의 지인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병호 기자 jusbh@

노조원 물품 빼돌린 광주시청 직원들 검찰 송치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던 보육대체교사 노조원의 물품을 청사 밖으로 빼낸 광주시청 도로과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청은 9일 광주시청 도로과 직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4일 새벽 1시에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노조원들의 텐트와 피켓, 돗자리, 벽보 등을 청사 밖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시청 로비에서는 보육교사들이 광주 사회

서비스원으로부터 부당하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복직 및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시청 직원들은 노조원들이 현장에 없는 틈을 타 40여분에 걸쳐 텐트를 옮기고 벽보를 떼어낸 뒤, 청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농성 물품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농성 물품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농성 물품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상화폐 사기범 밀항 도운 60대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수배범의 해외 밀입국을 알선한 60대 A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배중인 B씨의 밀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입원·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 조작과 상장으로 수천억원대의 불법자산을 형성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는 A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신안 흥도 인근 바다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다 붙잡혔다.

해경은 B씨와 밀항 조력자 등 총 4명을 검거해 B씨와 밀항선박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육상운반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밀항을 준비했고, 선장과 선원은 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밀항 알선 중간책으로 7000만원을 받은 40대 C씨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빛고을로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